

新韓國創造를 위한 科學技術發展方向



성 나 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果敢한 投資와 革新이 關鍵—

오늘 大韓電氣學 의 1993년도 夏季學술대회의 서막을 여는 이자리에서 전기공학도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평소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大韓電氣學 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봉사하여 주신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 원로 및 선배 동학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우리가, 새로운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2000년대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고도화하고 과학기술력을 도약시킬려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내지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고서는 소기의 목표달성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필연적으로 통일이 되면서부터 세계는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가운데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 그 어느때에도 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종래의 국가안보개념도 군사면에서 경제나 과학

기술로 대체되어가고 있으며 자유무역의 대원칙이 자원민족주의, 기술보호주의, 기술패권주의, 기술민족주의등의 도도한 추세앞에서 움추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로 상징되는 선진국 주도의 국제과학기술 견제내지 보호추체는 중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향한 의욕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험난한 대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면서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그런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흥공업국가의 대열에 진입하여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의 사상최대, 최고의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여러방면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의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과 함께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국가발전의 주축을 “과학기술의 진흥”에 두고 과학기술의 창달을 통하여 산업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한데 큰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사회적 안

정기조동요와 대외경쟁력의 쇠퇴현상에 의해 경제의 활성화와 과학기술의 혁신이 상당히 무디어 짐으로써 “아시아 4마리 용”의 선두주자에서 겨우 후미를 따라가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할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새롭게 맞이한 「新한국」시대에 젊어져야 할 사명 또한 매우 크고 무겁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못지 않게 새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장 우선적인 국정지표로 삼고 국가원수의 의지를 실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기공학계의 지도자 여러분!

새로운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新韓國창조」는 국민의 창의와 참여를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며, 국민모두가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창조」의 관건은 바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으며 경제의 활성화는 왕성한 기술혁신과 과학의 진흥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이 갖추어 질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한국창조」는 과학기술의 발전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학의 진흥창달과 기술의 혁신 없이는 생산성 향상도, 경제의 발전도 나아가서는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40여년간 일본·중국·러시아·미국이라는 세계 4대강국의 역학구도속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안고, 때로는 6. 25의 동족상잔과 폐허속을 헤매기도 하였고 후진국이 속명적으로 안을 수 밖에 없는 빈곤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어오면서도 韓民族의 저력과 지혜로 아쉬우나마 오늘의 우리들이 누리는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사적 시운에 맞춰 현재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기필코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할 이유는 지정학적 견지에서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치·경제·문화

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2차대전후 개발경제학과 기술경제학이 가르친 바와 같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저력으로 무장된 선진국이 되어야만이 예측불허의 세계사적 조류속에서 우리민족의 주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생존의 입지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신한국창조」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에서 추진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科學技術立國」의 당위성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다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과학기술진흥을 부르짖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추진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대중화운동과 과학기술입국의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새정부는 현재 부정부패의 척결과 침체된 경제의 회복,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등 3가지 주요시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목할 일은 이같은 모든 문제가 과학대중화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경제의 회복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일에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중요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병소를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과학정신 즉 창조적이고 문제를 이성으로 풀어가는 합리적인 사고를 몸에 배도록 하는 과학대중화운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은 과학탐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응용부분이라고 볼 때 기술개발은 그 자체가 특성을 갖고 있

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술은 응용방법에 따라 인류복지와 문명의 파괴라고 하는 엄청난게 다른 결과를 빚습니다. 과학기술 전반이 종종 비판받는 것은 사회윤리성을 저버린 기술개발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은 곧, 복지과 정의가 담긴 국가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은 나름의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민합의성입니다. 다시말해서 국민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책결정은 일부 소수집단의 이해관계에 집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후에 국가발전뿐 아니라 과학기술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은 민주적인 여론에 기반을 둔 국가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도 그 나름의 바람직한 특성확보와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일련의 일은 바로 과학대중화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한국 건설에 새로운 차원의 과학대중화운동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자정노력과 연구에 몰두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까마는 온 국민의 과학대중화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여가 없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과학기술포토조성사업과 대중화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형식적인 것이 없지 않고 또 유사한 사업이 여러기관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있겠습니까마는 정부의 지원의욕에 비해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하거나 또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상의 문제점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의 과학기술선진국민이 됨과 동시에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화·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기술과 기능이 골고루 대중화될 수 있는 행정지원·재정지원·제도적 여건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科學技術人力養成과 基礎科學研究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모든 기초연구 결과마저도 공표하기를 꺼리고 웬만한 발표는 지적소유권이란 무기로 중진국내지 후진국의 접근과 추월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자체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은 총체적으로 선진국과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장기간이 경과한 후라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결과도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사회적 의지와 신념어린 투자와 육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든 과학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기초과학의 토양없는 생산기술은 한마디로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다행히도 새정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공계 대학이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연구의 중심이 될 것과,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비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기초과학에서 얻는 가장 큰 가시적 성과는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입니다. 특히 기초과학에서 양성된 고급 인력은 기초과학에 뿐 아니라 공학 및 인접분야에 까지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어 폭넓은 인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양질의 고급인력, 또 수요에 맞는 적절한 인재가 양성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급 과학기술인력 못지 않게 전문기술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첨단산업의 발달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처하여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의 교육내용, 학과 및 전공조직, 정원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까.

고급 기술인력 부족 현상의 큰 부분이 분야별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체 인력 증원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고, 그나마 근거와 정확성이 분명치 않은 필요 인력 예측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시설, 예산, 교수 요원의 뒷받침이 없이 이공계 대학 정원 확충에 급급해 교

육의 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의 경직된 학과별 정원 제도와 학부에서의 지나친 전공위주의 교육 때문에 폭 넓은 기초적 능력을 갖추고 빈번한 산업 구조 변화에 부응할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의 실험·실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론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공계 대학 정원을 학과별로 세분하여 고정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전체 정원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복수전공, 부전공제를 활용하여 배출 인력이 첨단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에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技能人力의 양성문제입니다.

기능인력의 사회적·경제적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부족은 심각한 인력난과 함께 임금상승을 통한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고교 졸업자중 공업계는 8.5%로 대만의 47%와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이었고, 기능인력의 열악한 사회적 대우 때문에 중학 졸업생들의 실업계 고교 진학 회피현상이 지속되고, 대학 정원의 3배 이상의 학생들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함으로써 대입 과열 현상과 대졸자 실업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에 필요한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 제고 및 고급 과학 두뇌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이 혁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교사의 자질, 실험·실습 여건, 상급학교 입시제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여 초·중등학교의 “지식전달 중심 교실”을 창조적인 “실험·실습 중심 교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초·중등학교 과학관련 교과서를 실험·실습 중심으로, 또 과학교육과정을 탐구과정 중심, 실생활 문제중심, 통합과학적

접근방향으로 과감히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研究·開發을 더욱 性시키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애요인중에서도 ①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조치의 미비 ②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연구활동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관리제도의 미확립 ③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학·연·산·관의 분업 및 유연한 협조체제의 미정착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은 대학을 통하여 기초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나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과제 또는 혁신형 기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여건의 조성활동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고, 그 애로 요인이 기업의 기술력, 즉 제품개발력의 미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최우선 목표도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상품 개발에 둘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우위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고, 이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비교열위 분야를 보완해 나간다는 전략적인 국가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경험이 일천함에 비하여 연구시설 및 인력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체로 선진국 기술의 도입과 모방 연구를 통한 국산화(수입대체)에 치중해온 결과 해외기술의존도가

높고 독창적인 기술의 자생능력이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명을 권장하고 특허를 보호하여 우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그간 정부시책의 일관성 결여 및 연구기관 자체 능력상의 제약으로 학문에 기초를 둔 원천기술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의 유지 및 타산업체에 중개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응용 연구소로 일부에서는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처우가 미흡한 관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고급연구인력들이 대체로 경쟁이 없는 대학으로의 전직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당사자인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시장과 직결된 연구개발 수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요유인(Demand-Pull)이 기술공급체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수요유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체계를 구성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각 연구개발 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전제로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통하여 총체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경제로 제2의 도약을 지향하는 신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의 연구개발활동이 이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목표와 투자, 운용방안이 수립되어 소기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규제개념에서 지원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생산현장과 연구실의 교류를 통한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문화와 풍토가 조성,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연구소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제반규제완화, 그리고 연구의 주

체인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연구효율성 제고등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평가제도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서 지금까지의 관 위주의 경직된 평가를 바꾸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회중심 또는 해외과학자 참여」등의 방법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R@&D 활성화 방안은 기초연구와 첨단기술개발문제, 그리고 산업 기술개발을 연구주체인 대학, 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나아가서는 정부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여야 할 각자의 역할이 상호협조아래 명확히 구분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따른 투자재원의 배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產學 同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학·연 협동연구의 경험부족으로 자연이 공동연구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며 산·학·연간의 정보교류가 원활치 못함으로써 상호신뢰감이 부족하여 협동연구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학·연 협동은 각 개체간의 협력과 이익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각 개체의 투자가 전제될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산학협동을 “기업은 돈을 내고, 대학은 연구한다”는 식의 개념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산학협동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중에는 연구비 지원이 모든 대학, 모든 교수에게 “공평하게” 지원한다는 방식이어서 한번 연구비가 지원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비를 획득할 수 없게 되어 자주 전문분야를 바꾸어 온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분야를 장기간 꾸준히 연구하는 교수가 육성되지 못했고 협동의 결과도 형식에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다.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회의 학술활동이 매개체가 되고 여기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도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산·학 협동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

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대형 산·학·연 협동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관리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70-80년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관리자가 많이 양성되어 기업연구소에 공급되었습니다. 여러 기업간의 협동 연구를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는 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중에서 시스템공학적인 관리 기술을 갖춘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국민복지적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건·의료 및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관련하여 결론을 맺고 저의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발전방향을 몇가지 중점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총의가 수렴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같은 계획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R&D투자재원의 확보가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면서 정부가 이미 공약한 2001년까지 GNP대비 5%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을 기필코 제정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1960년대식의 낡은 “행정체계”로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 기술패권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배분을 중

합조정하며 나아가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총괄행정체계”로의 혁신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처의 역할과 기능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과 각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체제로 강화하고 특허·표준·정보등 과학기술혁신 핵심업무에 대한 조정권을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차체에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업기술개발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있는 환경, 보건의료, 교통, 원자력, 정보통신, 농업등과 관련된 기술개발대책 또한 절실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처간의 역할분담과 과학기술처의 총체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현재 신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드시 이런 당면과제와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의 혼연일치된 이해와 지원아래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서 우리과학기술자는 물론 국민모두의 의식이 「합리·능률·창조」의 정신으로 개혁되어 2000년대 대망의 「기술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新韓國창조를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도약에 전기공학인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면서 이 특강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大韓電氣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